



<새사연 확!新!광장 Vol.11\_부채>



# 청년부채 + 가계부채 = 우리집 빛 이야기

# 우리 집 빛 이야기

## 청년부채 편



천주희 flydebtor@gmail.com

저서: 노오력의 배신(2016, 공저),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2016)



## 목 차

- 1. 사례: 석사 졸업생 이야기**
- 2. 포스트-IMF 세대와 부채 세대**
- 3. 불공정한 금융부채경제: 빈곤 통치**
- 4. '빛 지지 않을 권리'를 위해!!**

# 1. 사례: 석사 졸업생 이야기



2005년 3월 서울 4년제 사립대 입학

... 휴학/복학 반복 ...

2011년 8월 대학 졸업

2011년 9월 서울 사립대 대학원 입학

... 1학기 휴학 ...

2015년 8월 대학원 석사 졸업

# 1. 사례: 석사 졸업생 이야기



대학 + 대학원 대학 등록금

5,000만 원

학자금 대출

2,200만 원

# 1. 사례: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주거비, 생활비, 식비,  
대학등록금,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

2억 원

# 1. 사례: 내가 이리려고 공부를 했나..



부채 1,300만 원

고학력 청년 실업자

## 1. 사례: 나는 이리려고 공부했다.

- 질문1. J씨는 왜 **학자금 대출** 을 받았는가?
- 질문2. **대학은 선택.** 안 가면 빛도 없지 않겠나?
  - 질문3. **청년부채**만 문제인가?



## 2. 포스트-IMF 세대와 부채 세대



1997년 ~ 2001년  
IMF 외환위기



2010년



선택1. 대학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선택2. 직장  
생활비 대출  
주거비 대출  
의료 보험



1980년대



-----  
국가부채 증가 (세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가족부양비 등

## 2. 포스트-IMF 세대와 부채 세대

### '청년' 대신 '포스트-IMF 세대'라 부르는 이유

- 제도/ 정책: 'IMF 외환위기' 관리
- 대학, 정부: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 다녀라!
- 가족, 학교: 대학만이 살 길이다!
- 부채사회: 빚을 지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구조

2010년



선택1. 대학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선택2. 직장  
생활비 대출  
주거비 대출  
의료 보험



-----  
국가부채 증가 (세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가족부양비 등

## 2. 포스트-IMF 세대와 부채 세대

- **제도/ 정책:** 'IMF 외환위기' 관리

=> 금융화 정책, 대출/신용 서비스 확대

=> 불안정한 노동: 대량해고, 비정규직 전환, 서비스업 확대

=> 가족경제 붕괴, 가계부채 증가

- **대학, 정부:**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 다녀라!

=> 2000년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

=> 학자금 대출 정책 확대 (정부, 금융권)

## 2. 포스트-IMF 세대와 부채 세대

- **가족, 학교:** 불안정한 사회, 대학만이 살 길이다!

=> 대학 진학률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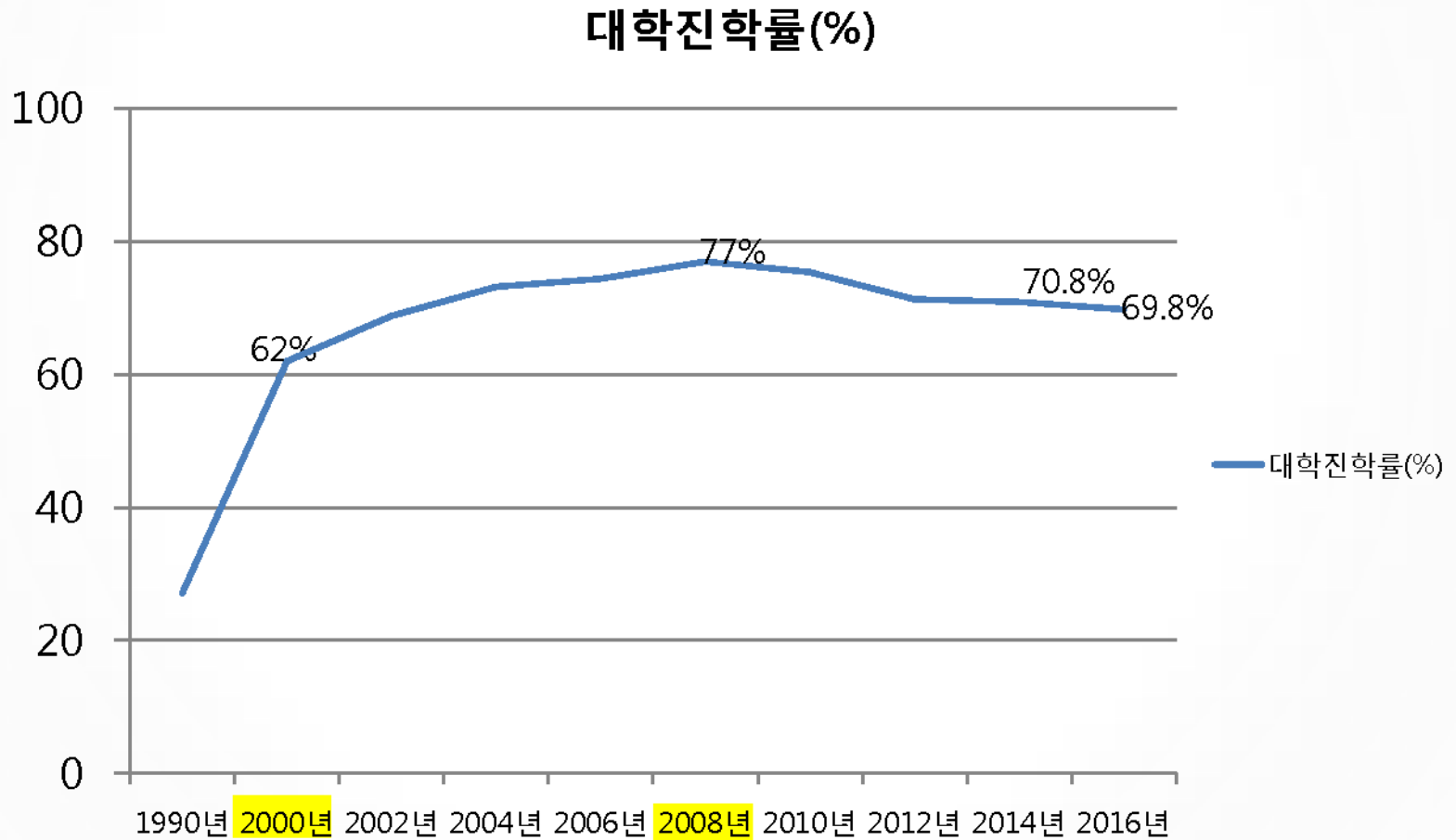
=> 사교육비 증가 ~ 가계부채 증식의 원인

=>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가계가 줄어들

자식은 학자금 대출로, 부모는 주택담보 대출로 살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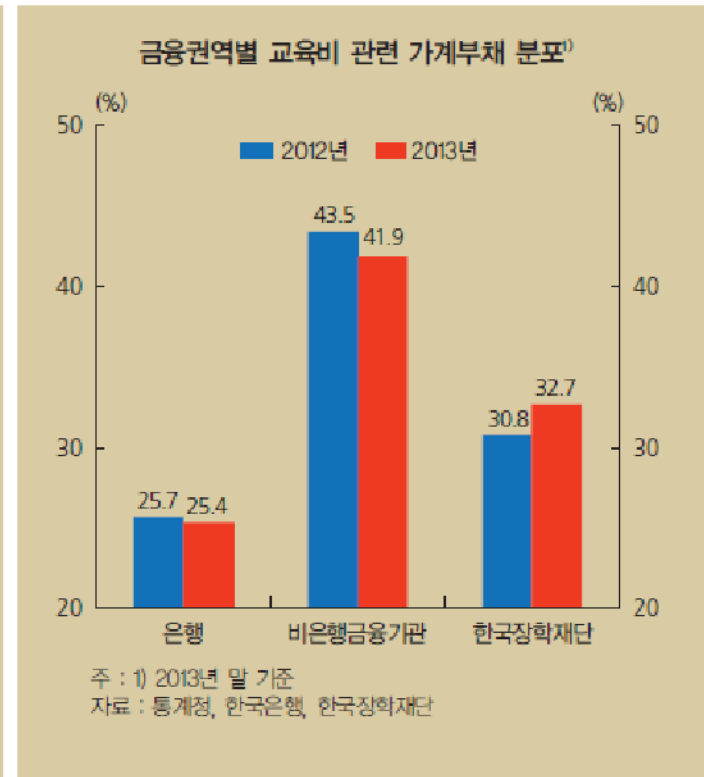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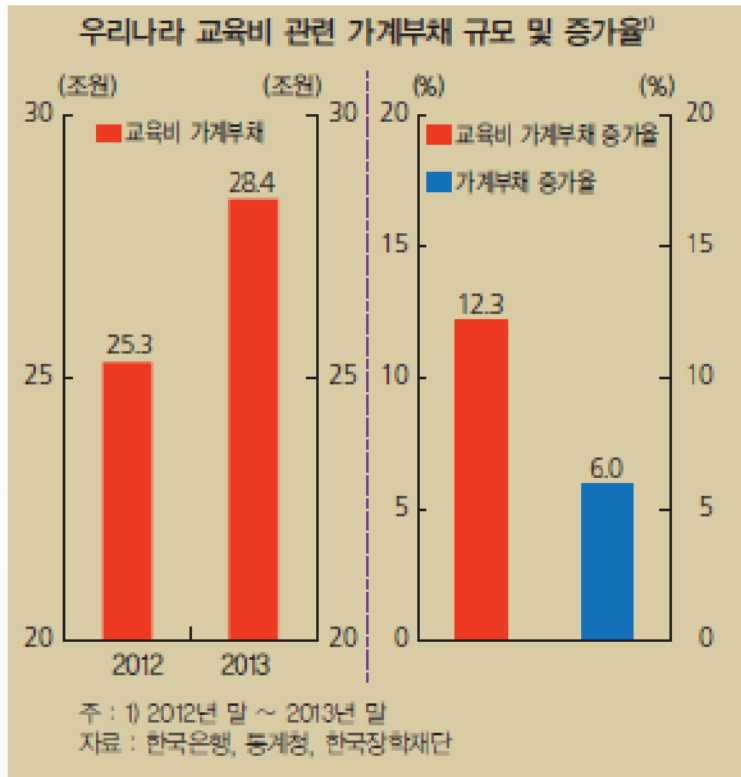
가족 중 신용이 살아있는 사람의 명의로 생활비 대출을.

## 2. 포스트-IMF 세대와 부채 세대



## 2. 포스트-IMF 세대와 부채 세대

- 가족, 학교: (사)교육비 관련 가계부채



## 2. 포스트-IMF 세대와 부채 세대

국가와 가족이 **위기**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금융복지'**라는 이름으로 **'대출'**, **'부채'**를 권하는 것!

**부채 세대**의 출현은 불가피한 구조

## 2. 포스트-IMF 세대와 부채 세대

- **부채사회**: 빚을 지지 않으면 삶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구조

=> 고비용, 저성장 사회 진입

=> 실업률 증가, 대출생활자 증가

=> 사회적 비용을 개인의 부채로 마련 (교육, 의료, 직업훈련 등)

=>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채로 생활하는 삶 (결혼, 육아, 장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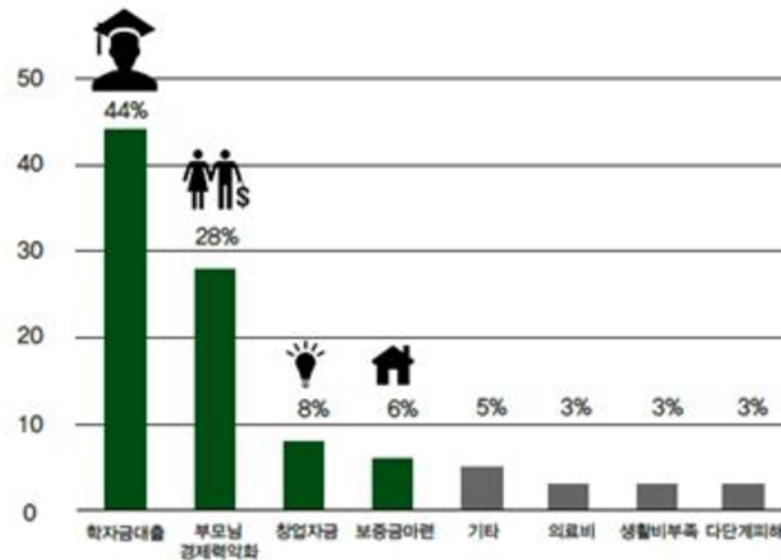


## 2. 포스트-IMF 세대와 부채 세대

- **부채사회**: 빚을 지지 않으면 삶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구조

### 서울시 청년 35세 이하 대출 최초 발생원인

자료 : 서울시 청년부채실태조사, 청년연대은행 토닥, 2013 (단위 : %)



출처: 서울시, 청년허브(2015), "2015 서울 청년은, 지금"

### 3. 불공정한 부채금융경제: 빈곤 통치

일상에서 금융 행위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보험 등



신용사회로 진입  
신용의 등급화, 부채의 지배



! 일상생활의 금융화(Randy Martin)<sup>1)</sup>

그동안 비금융주체였던 사람들이 금융주체로 유입 및 변화하는 과정.  
개인 스스로 '투자자' (기업인) 주체의 정체성을 내면화함.

! 부채의 지배(Creditocracy, Andrew ross)<sup>2)</sup>

시민과 사회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출/부채를 통해 해결 해야 하는 사회구조. 금융산업이 일상뿐만 아니라 정치를 지배하여, 모두가 채무의 노예가 되는 것을 가리킴.

1) Randy martin,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Temple University Press, 2002.

2) Andrew Ross, *크레디토크라시*, 갈무리, 2016.

### 3. 불공정한 부채금융경제: 빈곤 통치

1. 신용에 따른 등급화 -> 불평등한 사회 구조 고착  
- 저신용 등급에게 고금리 적용

2. 공동체 기반 신용 -> 금융신용으로 흡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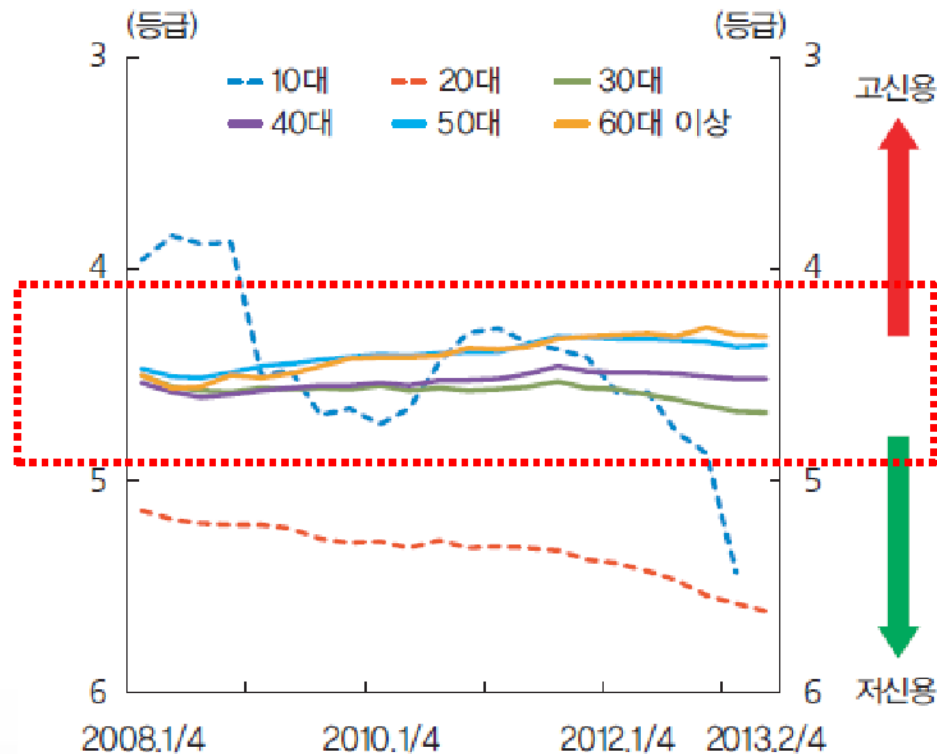
[효과] 경제적인 문제를 삶 전체로 인식  
- 삶을 신용등급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내면화

일상생활의 필수자원을 금융상품으로 마련

채무자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철저. 채무 노예화.

### 3. 불공정한 부채금융경제: 빈곤 통치

(그림 II-19) 연령별 평균 신용등급



주 : 1) 50만 차주 기준  
자료 : KCB

출처: 한국은행(2014), 금융안정보고서

## 4. ‘빛 지지 않을 권리’ 를 위해!!

### 제안 1

빛을 ‘개인의 문제’ 라 생각 말고,  
사회적인 것으로 사유하자.

ex. 교육비, 의료비, 가족 부양비 등

### 제안 2

청년부채 정책,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나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

ex. 서울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네트워크

## 4. ‘빛 지지 않을 권리’ 를 위해!!

제안  
3

빛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ex.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춘희년네트워크, 청년지  
갑트레이닝센터, 주빌리 은행 등

- \* 청년연대은행 토닥 [cafe.daum.net/ybank1030](http://cafe.daum.net/ybank1030)
- \* 청춘희년네트워크 [www.youthjubilee.net](http://www.youthjubilee.net)
-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moneyhabit.kr](http://moneyhabit.kr)
- \* 주빌리 은행 [www.jubileebank.kr](http://www.jubileebank.kr)

## 4. ‘빛 지지 않을 권리’ 를 위해!!

제안  
4

- 빛을 전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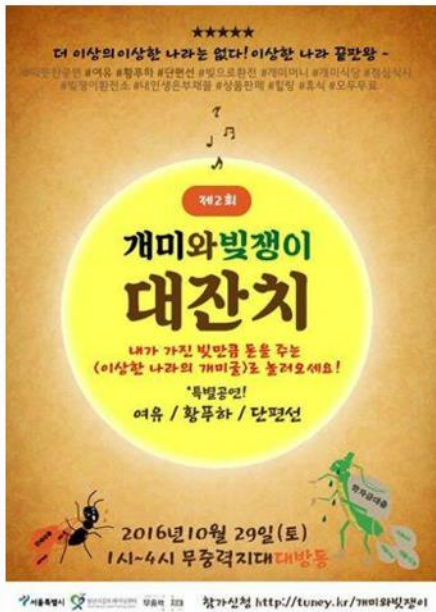
ex. 내 인생은 부채꼴, 개미와 빛쟁이 축제



내 인생은 부채꼴

# 4. '빚 지지 않을 권리' 를 위해!!

## 개미와 빚쟁이 축제 2 + 우공가



f 천주희



## 4. ‘빛 지지 않을 권리’ 를 위해!!

### 개미와 빛쟁이 축제 2



---

## • 질의 응답

flydebtor@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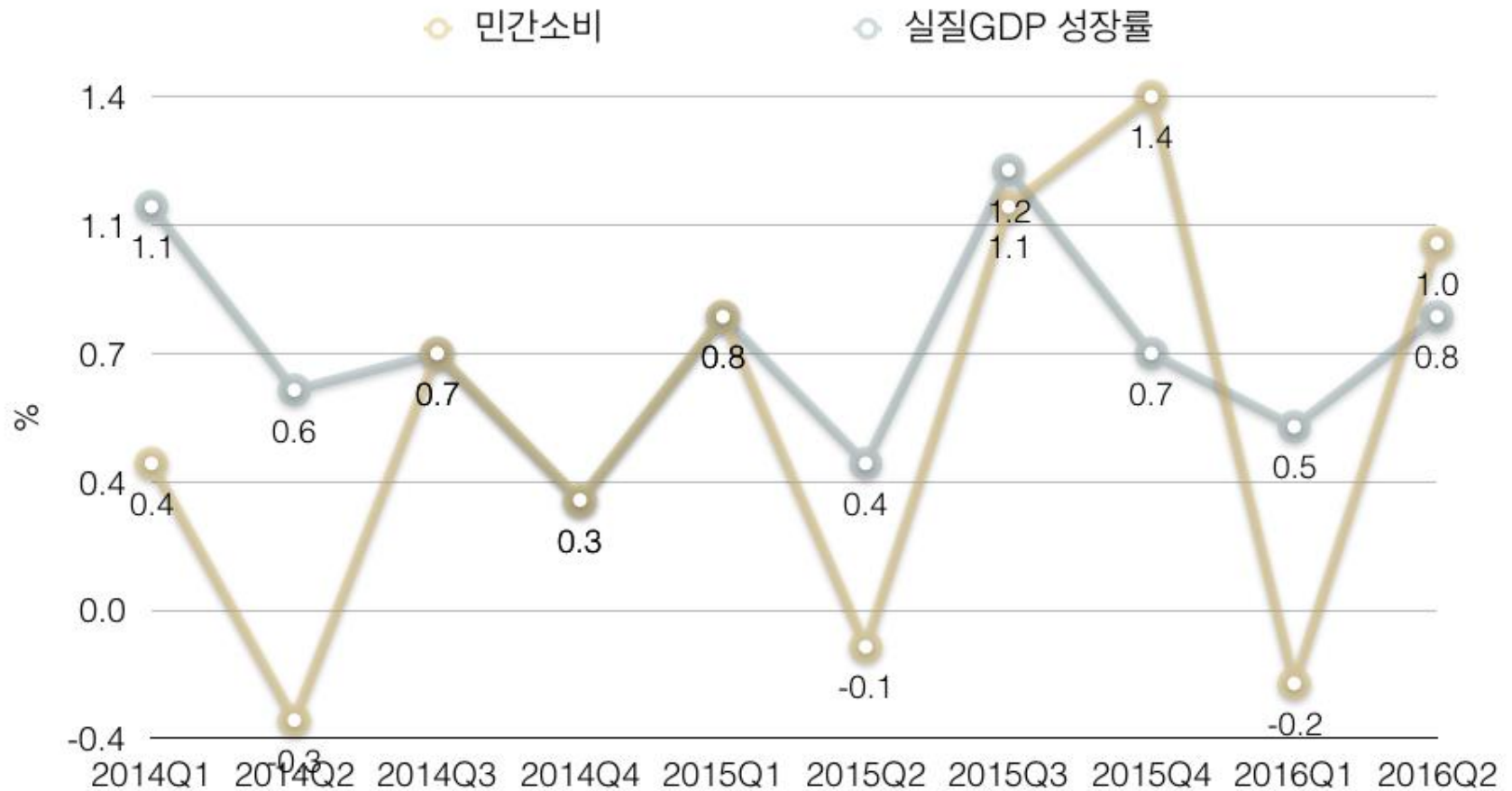
# 한국 가계부채 특징과 대안

최근 가계부채 총량 증가 특징과  
공적부실채권조정기구 도입의 필요성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송종운 연구위원

# 2016' 전반기 실질 GDP/민간소비, 건설 투자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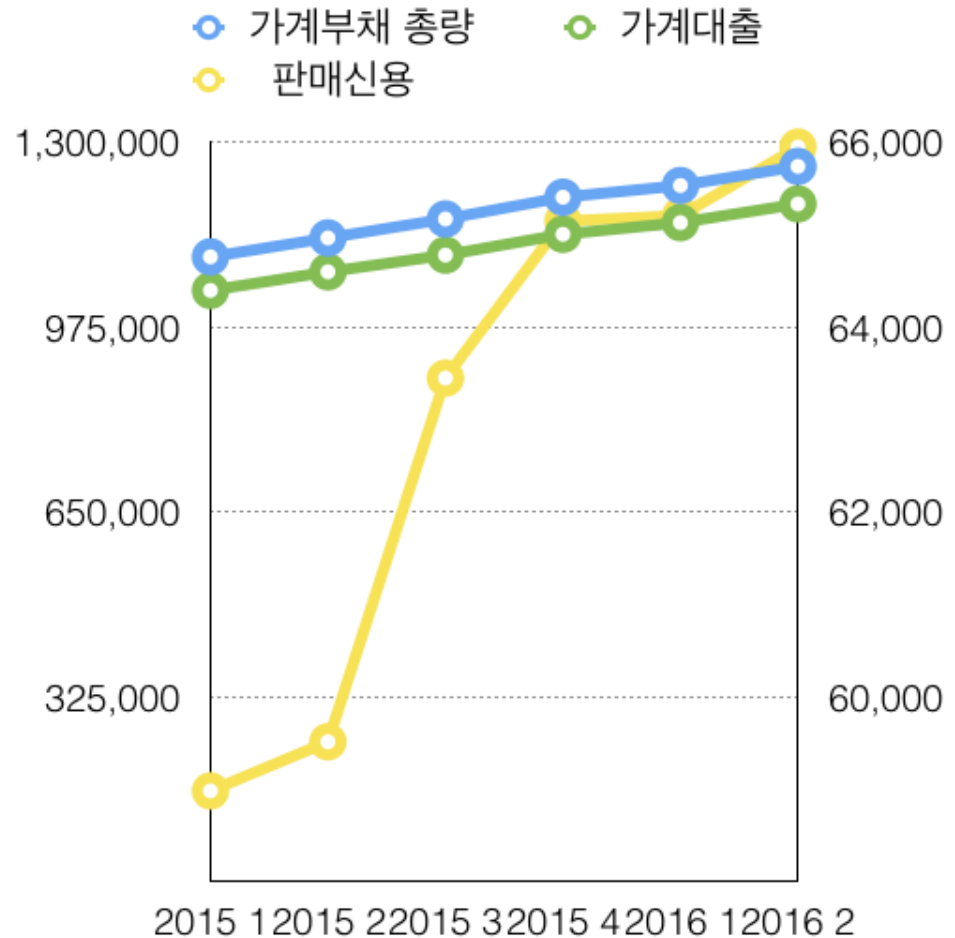
#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증가 배경

2/4분기 중 33.6조 원 증가하여 전분기 증가규모를 크게 상회.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4분기 중 17.4조 원 늘어 전분기에 비해 큰폭 증가.

이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크게 증가한 데 기인.

비은행 가계대출도 2/4분기 중 15.5조 원 증가하여 전분기 증가폭을 상회.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도 상호금융은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 가계대출, 은행과 비은행 모두 큰 폭 증가

가계신용은 2/4분기 중 33.6조 원 증가하여 전분기 증가규모를 크게 상회하였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4분기 중 17.4조 원 늘어 전분기에 비해큰폭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2/4분기 중 15.5조 원 증가하여 전분기 증가폭을 상회하였다.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도 상호금융은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조 원)

	2014	2015		2016		
		연간	Ⅲ	Ⅳ	Ⅰ	Ⅱ
예금은행대출	38.5	44.1	14.3	22.2	5.6	17.4
(주택담보대출)	36.7	36.1	11.5	18.0	5.4	13.0
(기타대출)	1.8	7.9	2.9	4.1	0.2	4.4
비은행대출 <sup>1)</sup>	26.0	68.8	15.1	14.3	14.9	15.5
(상호금융)	10.6	10.1	3.1	4.5	3.3	5.5
(신용협동조합)	3.0	4.8	1.2	2.2	1.7	0.9
(새마을금고)	5.6	4.2	1.5	1.8	1.3	2.9
(보험회사)	4.4	8.0	2.0	3.6	1.2	2.2
(저축은행)	1.1	3.4	0.6	1.0	1.3	1.1
(여신전문기관)	2.3	3.0	1.2	1.2	1.3	2.1
(기타) <sup>2)</sup>	-1.0	35.3	5.6	0.0	4.8	0.9
판매신용	1.7	5.0	3.9	1.7	0.1	0.7
합계	66.2	117.8	33.4	38.2	20.6	33.6

주: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신용협동기구,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비은행금융기관

2) 연금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등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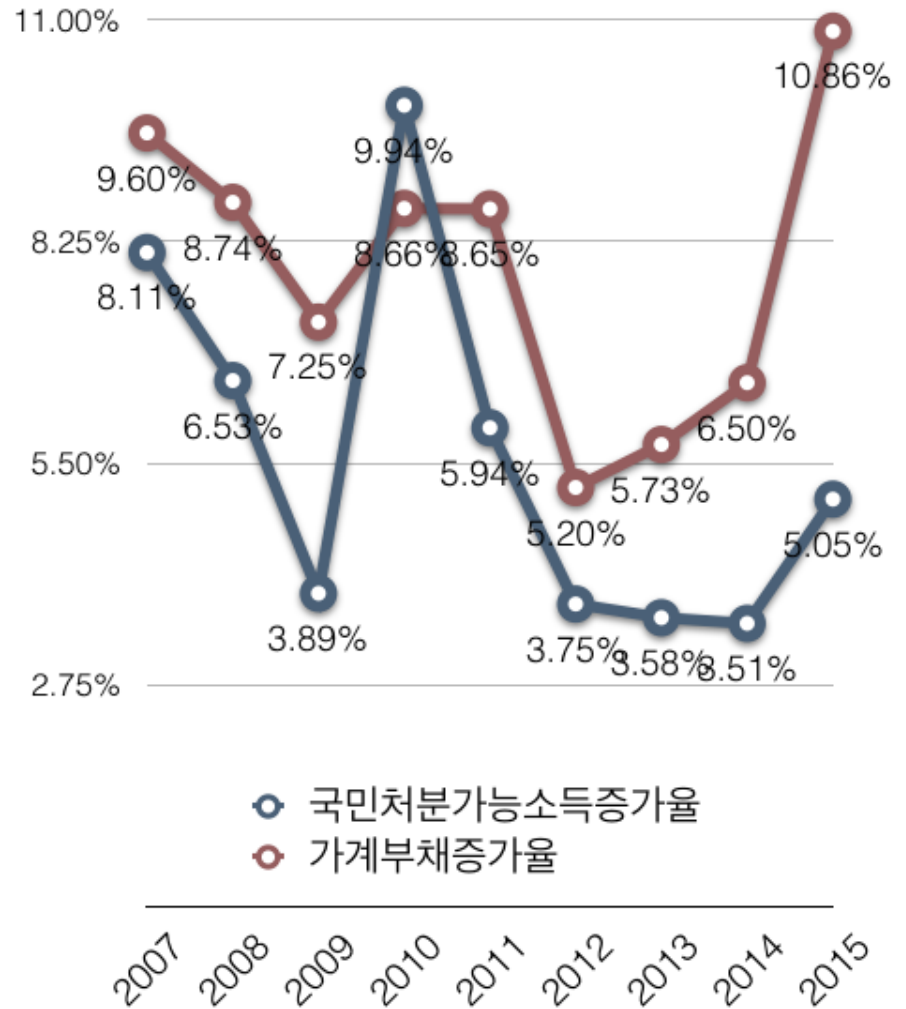
# 가계부채증가율 vs 국민처분가능소득증가율

국민처분가능 소득은 가계가 부채를 갚아 나가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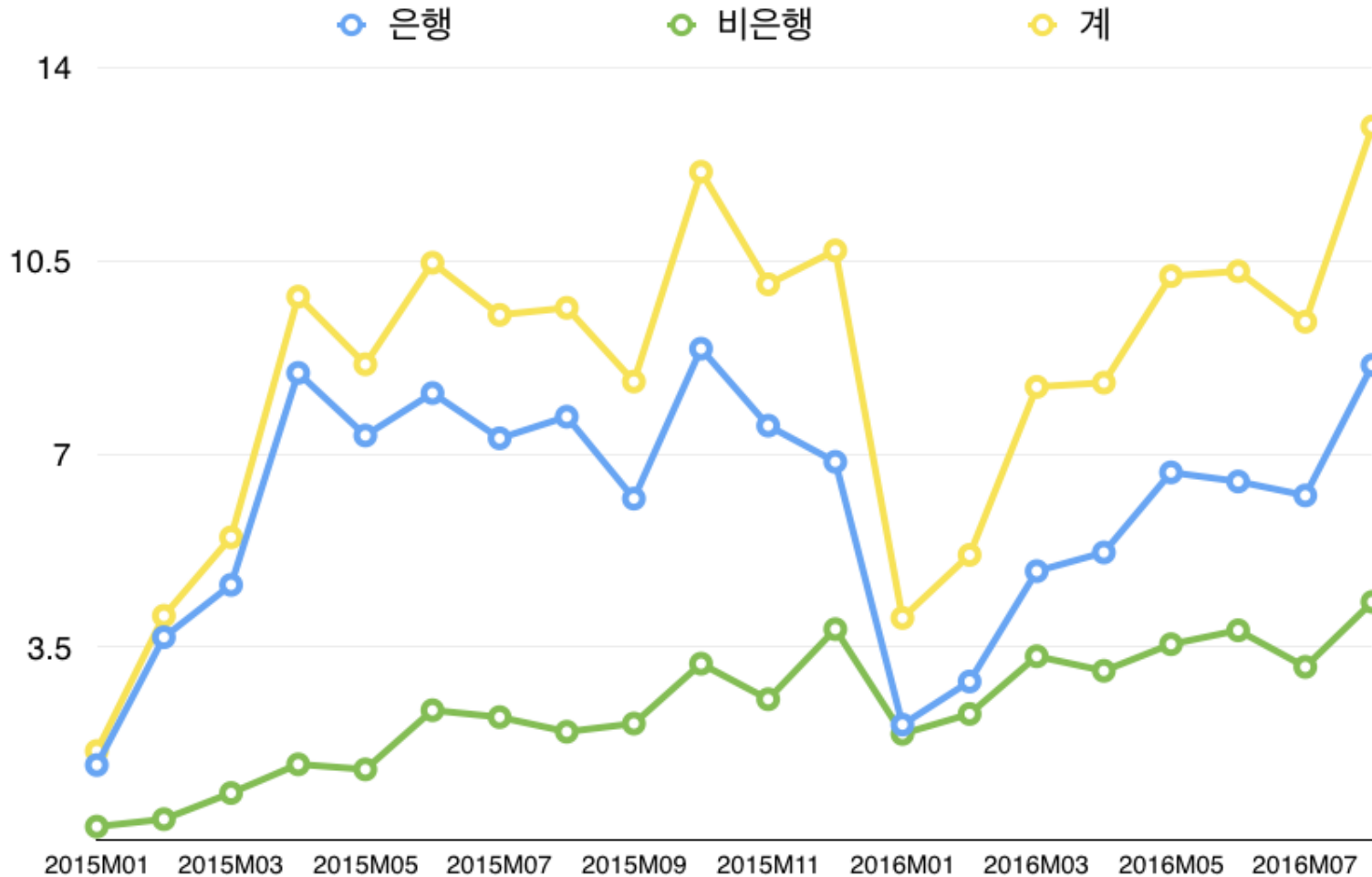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국민처분가능 소득 증가율은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훨씬 낮아 가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12년을 분기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국민처분가능 소득 증가율은 매우 저조하여 심각한 상황임

사실상 이제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 보다 가계부채 도산 위험과 도산 이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한 실정임



# 가계부채 총량, 제2금융권 대출이 끌어 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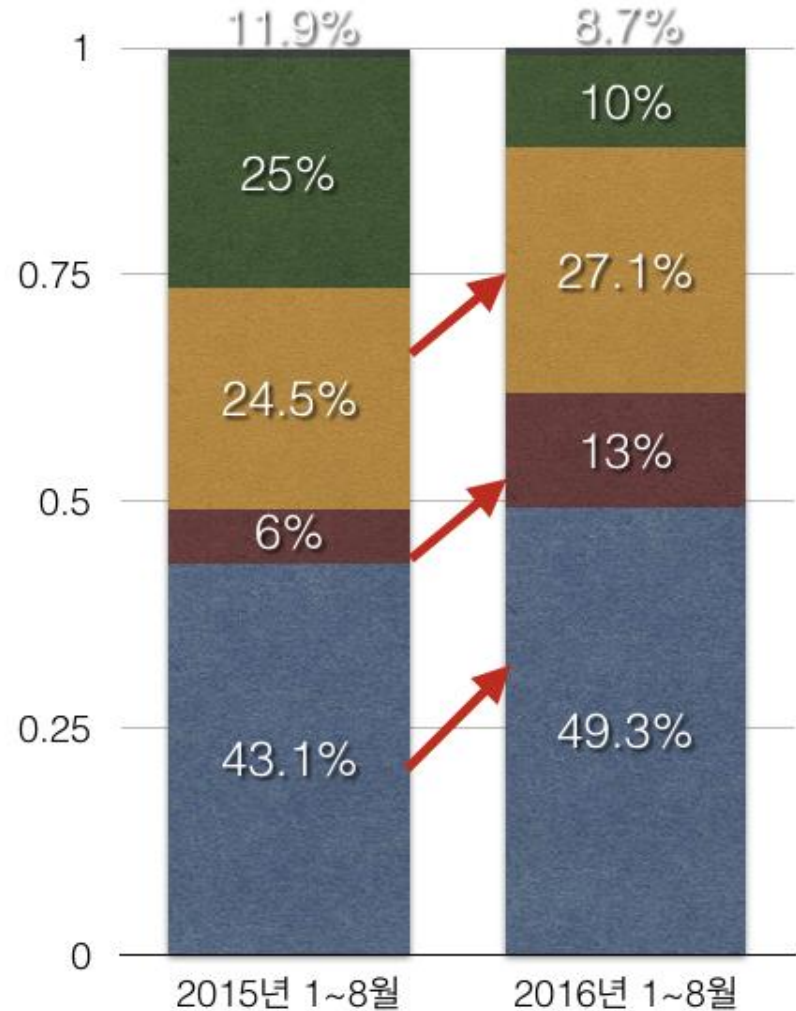
# 가계대출, 주택임대차/생계자금 중심 증가

- 주택구입
- 생계자금
- 사업자금
- 주택임대차
- 대출금상환

최근 전세난 지속 등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이 주택임대차 및 생계자금 용도의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에 따른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월세등주거비와 기타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금융사별 가계대출 추이

- 여신전문업체 가계대출
- 저축은행 가계대출
- 은행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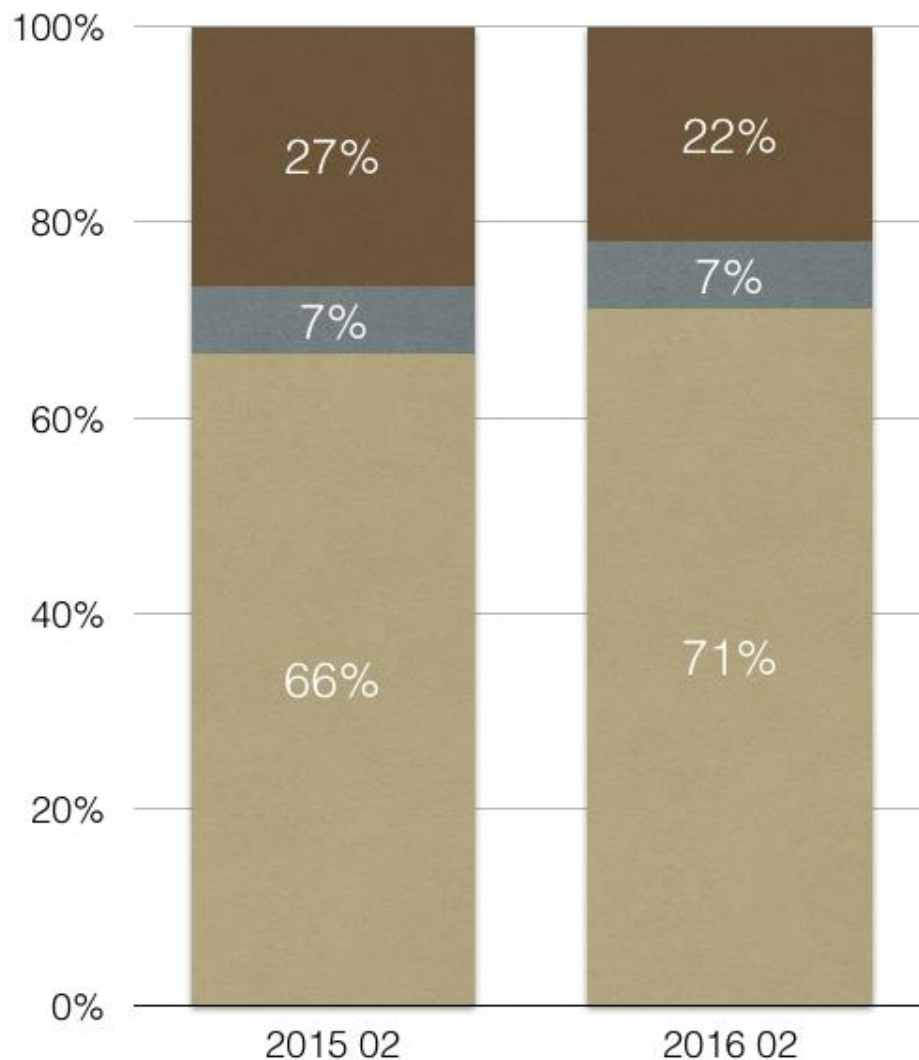
## 부정적인 악무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하였고 비은행권 대출 역시 상당 수준 증가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사실상 정책 당국의 잘못된 조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금융 비용이 과도한 가계의 경우,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 채무조정 사례와 같이 공공에게 이로운 채무조정 과정이 있었다면, 굳이 추가로 대출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임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및 자산 가격 하락 > 금융 비용과다 및 처분가능 소득 감소 > 추가 대출 필요 > 은행권 대출 심사 엄격 > 카드론 포함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 증가 > 가계 차주의 도산 가능성 확대



가계부채 문제, 총량 증가 보다  
그림자 채무에 주목해야

# 민간 AMC가 지배, 왜곡하는 부실채권시장

첫째, 대형 민간 AMC 전속화에 따른 시장 발전 저해가 심각.

유암코, 대신F&I 등 대형 민간 AMC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보비대칭성과 자금력에 우위한 그들만의 전속시장을 초래 함으로써 거래 비용 절감 및 시장효율성 확보 등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은행출자 AMC의 경우 은행 손실을 이연하는 loss parking 효과를 제공하면서 이익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비판도 제기

둘째, 과점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왜곡 등 시장 과열의 부작용

민간 AMC 진입 이후 시장규모 확대는 실현되었으나 과점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결정구조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민간 AMC의 평균매입률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로 주택 담보부실채권의 경우 OPB(Outstanding Principle Balance: 매각 대상 자산의 미상환 원금잔액) 대비 낙찰률이 99%까지 상승하고 있는 추세

# 민간 AMC가 지배, 왜곡하는 부실채권시장

셋째, 반복적인 재매각 등 채권자 이익 편향적 거래 구조로 시장이 고착화

수익창출이 목적인 민간 AMC의 부실채권시장 독점 이후 부실채권의 반복적인 재매각으로 채권자 이익 위주의 시장으로 편중

재매각이 반복됨에 따라 과도한 연체이자 등 통계상 파악되지 않는 일종의 그림자 채무(Shadow-debt)로 인한 채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그림자 채무로 인한 가계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임

넷째, 수익성 위주의 부실채권 거래 편중에 따라 시장 기능 미흡.

자금초과 수요상태에서 대출심사 시 담보와 보증을 우선시함에 따라 여타 국가와 같이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relationship) 유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부실채권 정리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채권회수 극대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함.

# 민간 AMC가 지배, 왜곡하는 부실채권시장

국내 대표적인 부실채권 투자자인 유암코와 대신 F&I가 투자한 부실채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까지 담보채권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특별채권이 혼합된 담보채권 풀(pool)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민간AMC들이 부실채권 시장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입한부 실채권 중 일반담보채권 풀(pool)및 담보채권과 특별채권이 혼합된 풀(pool)을 매입한 비중은 각각26.7%와 56.8%로 합계83.5%

또한 담보채권과 특별채권이 혼합된 풀(pool)의 경우에도 특별채권 비중이 낮고, 특별채권 상당부분이 청산형인 관계로 그 성격이 담보채 권과 유사

# 부실채권, 금융기관과는 분리 개인 채무자는 분리되지 않고 추심의 대상이 됨

(단위 :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3Q
대손상각	4.4(31.4)	9.4(31.6)	8.3(30.5)	9.2(30.9)	8.8(35.6)	8.6(35.2)	4.9(30.1)
매 각	1.6(11.4)	4.2(14.1)	6.4(23.5)	7.4(24.8)	6.8(27.5)	6.2(25.4)	3.1(19.0)
ABS	1.3(9.3)	3.8(12.8)	0.0(0)	0.0(0)	0.0(0)	0.0(0)	0.0(0)
담보처분	3.8(27.1)	5.8(19.5)	5.8(21.5)	7.1(23.8)	5.4(21.9)	5.5(22.5)	4.5(27.6)
정상화	2.7(19.3)	5.0(16.8)	4.8(17.8)	5.5(18.5)	2.7(10.9)	3.1(12.7)	2.7(16.6)
기 타	0.2(1.4)	1.4(4.7)	1.6(5.9)	0.6(2.0)	1.0(4.0)	1.0(4.1)	1.3(8.0)
정리실적	14.0	29.7	27.0	29.8	24.7	24.4	16.3

주 : ( )는 연도별 부실채권정리방식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기관: 1차 시장(은행 → 민간 AMC)을 통해 부  
실을 분리·회복

채무자: 재매각에 따른 2차 시장(민간 AMC → 대  
부·추심업체)으로 편입

금융기관들은 건전성 개선을 위해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을 통해 대차대조표에서 제외시킴

국내 은행들은 2014년 1~3분기 동안 16.3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는데, 정리방법 별로는 대손상각  
4.9 조원, 매각 3.1조원,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 4.5  
조원, 여신정상화 2.7조원, 기타 0.2조원을 정리 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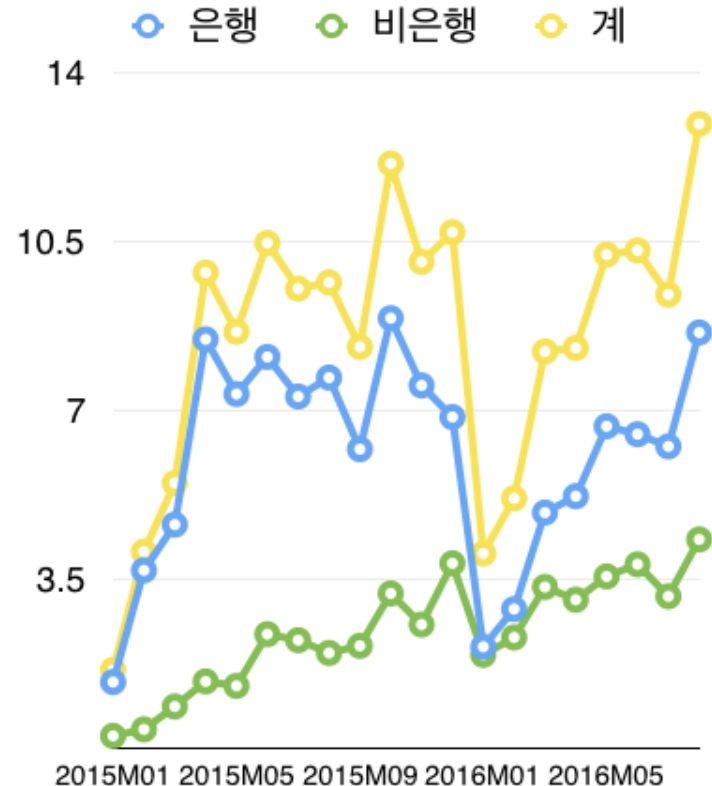
# 민간 AMC 부실채권 조정 관행, 현 가계부채 증가 유형에 적절하지 않음

2015-2016, 은행 및 비은행 가계대출 추이

최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고 있어, 이 부분에서 부실채권 발생이 우려.

유암코, 대신F&I 등 대형 민간 AMC가 지배하는 현 구조에서는 제2금융권부실채권 처리도 곤란할 뿐더러 설사 인수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매각처리 할 것이어서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임

즉, 대형 민간 AMC 이익을 늘것으로 보이거나 가계 채무자는 약탈적 부실채권 시장 구조에 의해 더욱 고통받을 것으로 보임





# 공적 부실채권 조정 기구 도입의 필요성

# 민간 AMC 부실채권 시장 전속과 공공에게 이로운 부실채권 조정의 불가능

국내 부실채권시장은 유암코와 대신 F&I가 양분하고 있으며, 독점화된 대형사들이 가격과 수량 통제를 통해 독점적 이윤을 취할 수 있는 상황

대형사의 독점적 지위로 중소기업과의 경쟁이 제한되고, 높은 매입률과 낙찰률에 따라 시장을 독식할 수 있음. 2012년 상반기 중 부실채권 입찰에서 대형사들은 일반담보부 채권에 대해 80~90% 대의 매입률을 제시하여 낙찰, 이는 낙찰가를 보상받으려는 과도하고 불법적인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대형사의 매입률은 타투자자보다 5~10% 이상 높은 수준, 조달금리에서도 대형사의 경우 출자은행과 동일한 3~4% 수준이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6~7%대로 평균 3%p 이상 차이

유암코는 국내 6개 은행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라 출자은행들이 자신들의 부실자산을 자회사나 마찬가지로 민간 AMC로 이전

실제 2013년 기준으로 유암코는 6개 주주은행들의 부실채권 3조 8,790억 중 45.4%인 1조 7,628억 원을 매입. 우리은행의 경우 전체 부실채권 7,390억원 중 55.7%를 유암코에, 16.7%는 당시 우리 F&I에 매각.

# 채무자 시각에서 이해하는 광의의 부실채권 이해가 필요

채무자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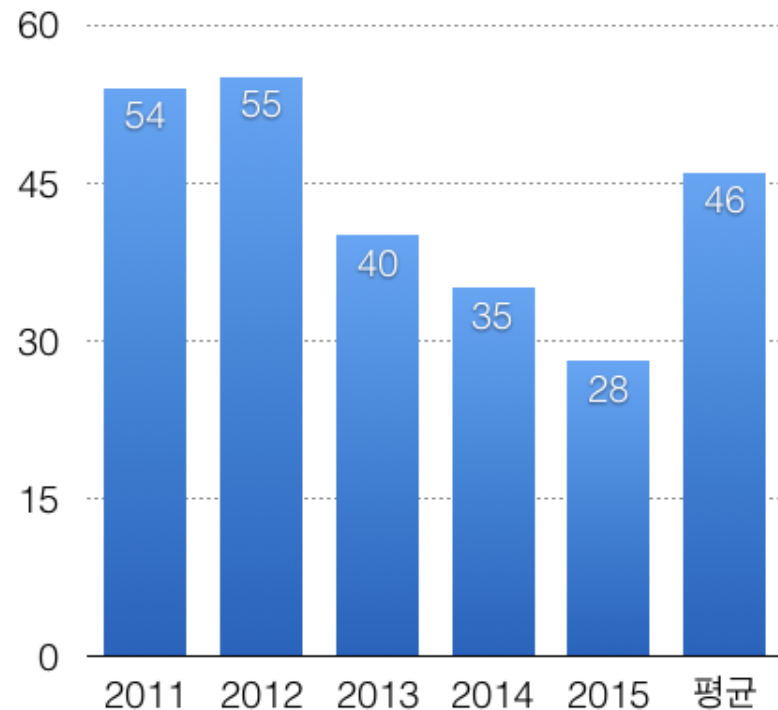
- 채무자 자신 및 경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채권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함으로써 향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사라진 경우에도, 경제 내에 여전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추심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부실채권 정리란 부실채권을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실 채무자로부터도 분리해냄으로써 채무자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집 넘긴 뒤에도 빚 남은 차주 비중(%)



출처: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감독원

# 공적 조정 기구가 담아야 될 내용 I: 사적이익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추구

부실채권 점유율 제한 등을 통해 민간 AMC와의 경쟁을 지양하고 구조조정기업 채권처리 등 시장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부실채권시장 발전을 지원

민간 AMC 독점 이후 고착화된 채권자 이익 편향적 거래구조 개선. 부실채권이 완전히 정리 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을 분리시키는 것 외에 채무자로부터도 부실채권을 분리시켜 정상화하는 것이 필수

상시적인 위기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위기관리기구 역할

국가위기 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AMC 부실채권기관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부도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 제 역할 못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는 IMF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7년 11월 캠프를 통해 부실채권 인수·정리 및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

공적 AMC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

- 공적 AMC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중소기업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이 가능(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13조),
  - 해당 중소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자율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 가능(14조).
  - 자율협회의의 신규자금 지원 요청 시 자금 지원이 가능(21조)
  - 신규자금 지원에 반대한 채권은행의 분담금액을 공사가 지원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행에 보유채권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22조).
- \* 그러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도 불구하고 공적 AMC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 협약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자체도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제 역할 못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난립하는 부실채권 시장

공적 AMC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년~2014년까지 구조조정정리기금 운용 기간 동안 6조 2,000억원을 투입해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해운업계 선박 등 1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을 인수

인수자산의 대부분인 11조 4,000억원을 정리해 6조 6,000억원을 회수(회수율 107%)하고 잔여자산을 3월27일자로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공적 AMC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고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한 바 있음

그러나 부실채권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음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증가

이에 따라 연 10%대를 유지하던 부실채권 투자수익률이 2014년 상반기에 5%대로 하락. 2014년 상반기에 매각된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 낙찰가 비율이 대부분 90%를 상회 하면서 낙찰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경쟁심화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상환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공적 조정 기구가 담아야 될 내용 II: 부실채권 시장 개선을 위한 부실채권거래소 설립

## 부실채권시장 거래소 설립의 효과

- 현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참여 제한 해소
- 회수리스크가 큰 고위험채권의 투자기피 현상,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금융기관들의 채권 (재)매각 및 투자자의 불법·과잉추심 극심 회피 가능
- 채권평가, 매각 후 거래이력 관리, 매수·자산관리 지원 등 부실채권 거래 서비스를 지원 가능
- ‘가치평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 지원 가능
- ‘채권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채권 발생일자, 채권자 변동 등 채권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알 권리를 확보
- 재기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보유채권을 공적 AMC가 시장가격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거래 원칙 정착

# 공적 조정 기구가 담아야 될 내용 II: 또 다른 세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최근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 대한 금융시장 부실채권 증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과거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보유한 국내의 노하우 전수 및 유대관계 강화 등을 통해 위기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의 일환으로 캄코의 제안으로 2013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5개국 7개 구조조정기구가 참여한 국제협의체인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IPAF: International Public AMC Forum)’을 창설하여 아시아 경제안정망 구축에 선도적 역할 수행

- 보다 체계적으로 아시아 공공AMC들이 역내 경제 문제에 공동 대응 할 수있도록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개별 공공자산관리기구를 포함한 각국 정부의 제도적 역량 강화와 장기 지식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의 플랫폼을 제시
- IPAF는 각국의 부실자산(NPA) 및 부실채권(NPL) 공동투자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윤리경영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통해 빈발하는 국제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아시아 역내 경제안정망으로서 작동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사례

#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원칙

-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 주택시장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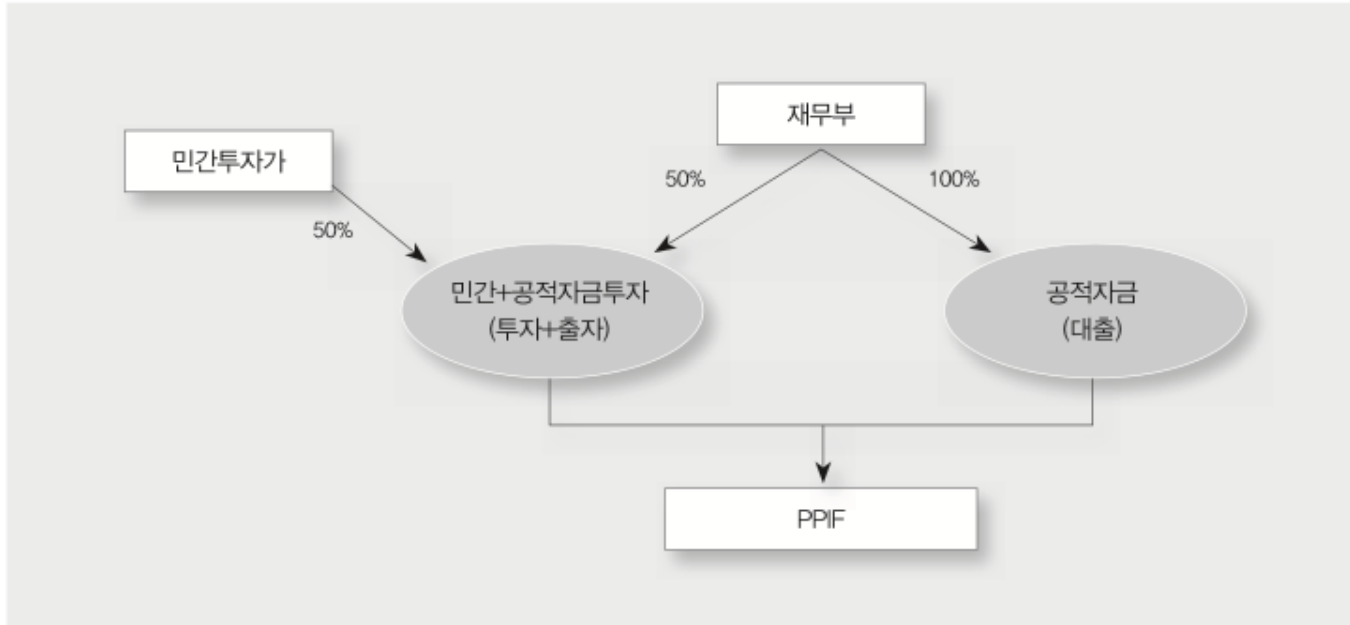
양자 모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구제프로그램+구조조정
- 재생 및 회생

은행지원 프로그램	Capital Purchase Program	은행산업의 정상적 영업지원을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원
	Asset Guarantee Program	BOA, Citigroup 등 금융산업 영향력이 큰 금융회사 대상으로 특정자산에 대한 보증 지원
	Target Investment Program	AIG, Citigroup 등 금융산업 영향력이 큰 금융회사 대상 자본 지원
	Community Development Capital Initiative	지역은행 및 저축은행 자금 지원
	Capital Assistance Program	19개 금융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결과에 따라 유동성 공급
신용시장 지원 프로그램	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ABS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총 2,000억 달러 지원
	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PIIP)	부실 RMBS와 CMBS 매입을 통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신용시장 회복
	SBA 7(a) Securities Purchase Program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증권매입을 통한 자금 지원
Automotive Industry Financing Program		GM, Chrysler 등 경기침체로 경영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대출 및 자본 지원
AIG Investment Program		AIG의 유동성 및 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주택시장 지원 프로그램	Making Home Affordable Program	주택압류 대상자의 거주안정 지원을 위해 채무재조정 실시
	HFA Hardest Hit Fund	주택경기침체가 심각한 주정부의 주택정책 지원
	FHA Short Refinance Program	금융회사의 모기지 재대출(refinancing) 지원

자료 : 미국 재무부

# 미국, 민관합동부실투자프로그램: 개요



민관합동부실투자프로그램(PPIP: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은 TARP의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정부가 직접 위기발생의 원인인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PPIP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재활성화를 도모

# 미국, 민관합동부실투자프로그램: 세부 내용

PPIP의 운영 체계는 매입대상 부실채권에 따라

## 부실채권매입프로그램(LLP:legacy Loan Program)

- 각 프로그램별로 미국 재무부의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다수의 민관합동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정부의 관리 하에 민간 개별 PPIP를 운용하고 PPIP는 재무부의 공적 자금 외에 추가 부실채권 운용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기 위해 각각 별도의 의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방준비제도의 기간 부자산담보부증권대출창구(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자금을 활용

## 부실증권매입프로그램(LSP:Legacy Securities Program)

- 부실증권매입프로그램)은 은행대차대조표 상에 축적된 부실채 (Legacy Loan)을 장부상에서 제거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재무부가 각각 보증과 자본 출자 형태로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지원
- LLP는 LSP와 동일한 구조로 미국 재무부(TARP)와 민간투자자가 각 50%씩 자본을 출자 하여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개별 LLP PPIP를 조성·운용하고 부실채권 매입 및 청산 등 프로그램 전반과 관련된 운영 및 감독은 미국 FDIC가 전담

#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주택압류 방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주택소유자들의 월별 모기지 납부액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모기지 서비스업자 등에게 정부가 직접 자금 지원(한도 \$500억)

모기지 서비스업자에게 모기지 조건 조정시 건당 \$1,000, 채무자가 3년간 모기지 계약을 지속할 경우 추가로 매년 \$1,000 한도의 인센티브 제공

모기지 서비스업자는 채무자가 상환을 계속할 경우 5년간 매년 최대 \$1,0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모기지 조건을 재조정할 경우 서비스업자에게 \$500달러, 모기지 투자자에게 \$1,500 지원

부채 대비 소득 비율(Debt-to-Income Ratio)을 적용 지출이 소득의 31%를 넘을 경우에만 HAMP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 HAMP 적용을 받아 모기지가 재조정되면 새로운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31%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한 달 세전소득이 3000달러인 주택소유자가 모기지과 이자 등을 합쳐 한 달에 1500달러를 지출한다면 이에 대한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은 50%가 되며,

이에 따라 이 소유주는 HAMP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만약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되면 월 지출 금액은 930달러로 조정됨. HAMP를 통해 모기지 상환 기간을 최대 40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 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 재융자 지원 프로그램

HARP는 모기지 재조정과 달리 융자 자체를 다시 받는 재융자 프로그램. HAMP가 기존의 모기지 조건을 변동시켜 월 상환 금액과 이자율 등을 인하시키는 방법이라면 HARP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이자율이 낮고 상환 조건 등이 나은 새로운 융자

일반 재융자와의 가장 큰 차이는 HARP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

HARP 역시 지난 2009년 재무부가 신설할 당시에는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주택 가치 조건 규정이 폐지돼 주택 가치가 모기지보다 낮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 2016년, 혁명의 해



순실4년 11월12일, 대한민국 시민혁명



트럼프와 미국대선 그리고 정치혁명 버니샌더스

- 일시: 2016년 12월 8일 (목) 저녁 7시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2호선 홍대입구역)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